

민주, '난방비 폭탄' 대정부 공세... "민생 파탄·경제 무능"

민생프로젝트에 "정부여당 무관심"
 "난방비 폭탄도 前정부탓 기 바빠"
 "尹 세울 대책을 민주당이 세우나"
 尹 'UAE 적 이란' 발언 비판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난방비 인상 등 민생 문제를 정조준해 대정부 공세를 폈다. 외교안보 분야 논란 등과 더불어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난방비 인상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파괴력이 크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무능론 부각의 최대 무기로 삼는 기류다.

2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지원 문제에 관심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언급

하고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 없어 보인다"며 "난방비 폭탄 관련 국민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요청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 전기, 가스요금에 대폭 올려 취약계층 고통이 매우 심각하단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에너지 바꾸쳐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과 이를 위한 협의를 촉구하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게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 경제에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민생고를 짊어 "전기요금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 대기 중"이라며 "300원 올린다면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은 명절 끝나자마자 갑자기 400원 인상을 얘기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엔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다", "난방비 폭탄에도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빠"며 "부디 민생경제를 최우선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금리,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줄어들어 지갑은 알뜰해 졌다"며 "정부는 정신 차리고 민생 해결,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더불어 "야당의 진정어린 제안에 귀 기울여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이마저도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난방비 폭탄 영수증이

인터넷에 마구 올라오고 있다. 대체 대통령은, 정부는 왜 이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민주당이 대책을 세우려 노력한다"며 "대통령이 일하기 어렵다면 그만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 상황을 지적하고 "가스, 전기요금 폭탄과 불도저식 민영화로 초가삼간을 다 밀어버리는 윤맹크 정권으로 불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중 이란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발언 이후 한-이란 관계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인정·사과하고 수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길 바란다"며 "가뜩이나 석유 대금 문제로 골치 아픈 한-이란 관계를 조속히 풀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해외나 대통령 말실수, 안보위기를 걱정하는 편"이라며 "이란에 특사를 보내 실수였다고 말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선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 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심을 등에 업어 의기양양한 후보는 시급한 민생경제와 무관한 여성 민방위법 개정 발언으로 국민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부 수장으로서 책무 대신 차기 총선을 위해 사당화에만 관심 있는 대통령, 민생과 민생 대신 권력 정찰, 출세기에만 혈안인 여당은 국민에게 어떤 희망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가 날아와 하늘이 뚫렸을 때 NSC도 소집하지 않은, 이런 분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윤심이 밀어줘서라고 하는데, 그게 윤심이었나"라고 비난했다.

최이슬기자

野 김민석 "이재명 중심 단결해야...부패혐의 입증되지 않아"

김민석 페이스북 통해 "몽쳐야 강하다" 글 올려
 "분란 리스크 불씨조차 안 만들도록 절제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현 시기 민주당 리더십의 안정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이라고 본다"며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몽쳐야 강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민생을

위해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리더십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시기 민주당 리더십의 안정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어떤 부패비

리혐의도 입증된 바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협치커녕 야당을 무시해왔고, 굳이 법무부장관의 비밀번호 해제거부 전력과 영부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무부나 검찰이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하다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대통령실은 품격 있는 신중한 국정운영이나 협치와는 먼 방향으로, 여당은 여성 민방위 운용하며 학폭같이 행동하는 퇴행적이고 매정한 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더욱 강하게 몽쳐야 하고 몽쳐야 강하기 때문"이라며 당내 통합을 주장했다. "과거 당 안팎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정책활동의 선을 넘은 계파적 그룹정치와, 내부투쟁을 노린 일부 언론의 이간 등으로 지도체제가 흔들리곤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지금은 그런 분란 리스크의 불씨조차 안 만들도록 모두가 극도로 절제해야 한다"며 "저부터 올해 모든 역량을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민생경제위기돌파에 집중하는데 전력투구하려 한다. 설 연휴를 마치고 다시는 각오"라고 전했다.

정승호기자

나경원 "당 화합 위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김기현-안철수 2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당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나 전 의원 핵심 측근은 25일 뉴시스에 "나 전 의원님이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나 전 의원은 그간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유력한 당권주자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갈등과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이 거

센데 다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불출마 원인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저출산위 부위원장직만 사임하자 대통령실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직과 기후대사직까지 모두 해임조치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해임조치를 두고 '대통령의 분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과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 비공개 일정으로 이화장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나고, 자신을 돕는 관계자들과 출마 여부를 논의했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할 경우 친윤후보인 김 의원과 비윤인 안 의원간 2파전 구도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나 전 의원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 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할 경우 이는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줄여보려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친윤 후보인 김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